

일본사회의 보수주의와 글로벌시티즌십

김 태 기 (Kim, Tae-ki)*

(E-mail : ktk@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3년 10월 17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1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 히토쓰마시 대학
현직: 호남대학교 일본어학과 부교수

일본사회의 보수주의와 글로벌시티즌십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사회의 변화를 글로벌시티즌십(세계시민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일본사회의 보수성과 글로벌시티즌십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90년대 중반 일본국민은 재일외국인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의 일본사회는 변했고, 일본여론은 지방참정권을 재일영주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글로벌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자신들과 타자를 구별하고 타자를 경계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는 꾸준히 변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정책도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되었다. 하토야마 전 수상은 일본열도는 일본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당당히 발언하고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돌출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주창한 '우애'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1990년대 말 이후 일본 교육계는 글로벌시티즌십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지역적으로 한정된 글로벌시티즌십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확산될 것이다.

[주제어] 글로벌시티즌십, 시티즌십, 보수주의, 재일외국인, 재일한인

I. 서론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정치나 사회를 바라다보면 ‘침략성’ ‘배타성’ ‘차별성’ 등의 단어를 많이 연상한다. 일본의 보수 정치가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독도 관련 발언을 하면, 여전히 일본은 침략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일본 우익이 재일한인이나 기타 외국인에 대한 공격적인 집회나 발언을 하면 여전히 배타적이고 차별이 강한 나라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일관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 붐 속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공연을 하고 있으며, 일본인들로 객석은 만원이다. 배용준 등 연예인들은 일본에서 ‘가미사마(神様)’로 여겨진다고 한다. 2012년도에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350만 명이나 되며, 한일간의 국제결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¹⁾ 불과 15년 전에는 일본대학에 한국학파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유사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한일간의 교류가 별로 없을 때는 일본의 침략성, 배타성 그리고 차별성만이 부각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한일간의 민간교류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일본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또 다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사회의 구성원이 크게 바뀌고 있다. 소자 노령화 현상 속에서 일본사회에 젊은 외국인의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과연 일본인들은 과거의 민족주의(내셔널리즘)를 고집하고 여전히 배타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외국인을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1) 필자가 소속해 있는 대학 졸업생도 최근 몇 년 사이에 3명이나 일본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다. 또한 매년 10명이 넘는 일본인교환유학생(대부분 여학생)들이 분교로 와서 한국의 남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사람들과의 공생을 피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국내만이 아니라 결국 일본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사회의 변화를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이후 시티즌십 및 글로벌시티즌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론할 필요 없이 시민성으로 해석되는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다. 엘리트적인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덕성이 중시되던 고대의 시민공화주의적 전통, 근대 이후의 평등이나 권리로서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전통도 있었지만, 최근의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사회참가형 시티즌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로의 확산 속에서 시티즌십의 논의는 당연히 글로벌시티즌십 논의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냉전 붕괴 이후 국경을 넘어서는 인간, 물건, 자본, 정보, 문화, 기술 등의 글로벌화, 즉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유동화 속에서 정치적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둘째 상호의존의 국제 사회 속에서 금융 불안, 개발로 인한 온난화 등 환경문제,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다양한 바이러스의 확산,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 국제 테러, 자원 고갈, 인권침해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늘어났다. 즉 이들 문제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민’의식이 강한 일본에서도 최근 글로벌시티즌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글로벌시티즌십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아직 일본사회는 유럽과 비교하여 ‘시민’의식은 물론 ‘주민’의식도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²⁾, 영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시티즌십 교육이나 활동을 본 따 이를 확산시키

2) 한국사회가 일본사회보다 주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높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보수적인 일본사회의 형태를 조금씩 변형시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사회의 보수성과 글로벌시티즌십(세계시민성)³⁾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보수성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이후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글로벌시티즌십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정책 변화,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시티즌십 지향의 정치가인 하토야마의 사상과 행동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의 글로벌시티즌십 교육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일본사회의 변화와 보수주의

1. 일본사회의 구성원 변화

1970년대까지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재일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정부에 의한 인도차이나 난민 및 외국인의 수용 확대나 ‘유학생 수용 10만 명 계획’ 등에 의해 재일외국인 수는 증가해 갔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단순노동인력 공급을 위해 1990년부터 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시행됨에 따라 일본계 남미인의 유입이 촉진되었다. 특히 브라질 및 페루인의 증가는 현저하여 아이치현(愛知縣)·시즈오카현(靜岡縣)·군마현(群馬縣) 등의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3) 글로벌시티즌십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국민’이나 ‘시민’ 혹은 ‘주민’으로서의 인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한 의식을 소유한 시민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배영주(2013) 참조.

그 결과 1990년에 일본에서 외국인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87만 명이였다. 그러나 2012년 말 현재 2,033,656만 명을 넘었다. 재일중국인은 652,555명으로 전체 재일외국인의 32%를 차지한다. 재일한인의 숫자는 530,046명 그리고 브라질은 190,581명, 페루는 49,248명이다(法務省 2013).

상기의 재일외국인은 외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수십만 명이다. 재일한인은 매년 약 1만 명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며, 중국인도 매년 약 5천명이 일본국적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일본 국적 취득 외국인 숫자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즉 외국인등록상의 ‘외국인’만이 아니라, 일본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면, 그리고 그 동반자와 자녀와 자손을 통계에 넣는다면, 일본에 거주하는 이민족은 훨씬 많다는 이야기이다. 역사적인 근거를 끄집어내서 일본의 ‘단일민족 신화’에 대한 반증을 할 필요도 없이, 일본은 현실적으로 다민족국가이다.

일본인의 국제이동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 외국으로 출국한 일본인의 총수는 18,490,657명이나 된다(法務省, 2013). 이들의 대부분은 관광 등 단기 체류자이기는 하지만 일본인구 약 125,754,000명(2013년 11월)의 약 15%가 외국에 나간 것이다.

이 중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3,497,525명이나 된다. 한국으로 입국한 전체 외국인 10,121,950명 중에 일본인이 접하는 비율이 약 35%나 된다. 민간 교류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법무부 2013, 34).

2012년도에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총수는 9,172,146명이다. 그 중에서 한국인은 2,315,238명으로 약25%를 차지하고, 중국이 2,107,645명(중국본토 1,626,265명, 홍콩 462,920명, 기타지역 18,460명), 다음이 대만으로 1,503,183명이다(法務省 2013).

일본 법무성 통계국은 약 30년 후인 2045년의 일본의 인구를 10,200여만으로 그리고 약 40년 후인 2055년의 인구를 9,100여만으로 보고 있다(總務省統計局 2013).

일본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젊은 전문 인력의 부족이 예상 되는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2008년 2월 “고용정책기본방침”(후생노동성 고시 제40호)을 통해 전문직 및 기술직 분야의 외국인 취업촉진과 취업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일본사회 속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론 그들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2. 외국인 지방참정권문제와 일본사회의 변화

1) ‘주민’의식의 발아(發芽)

해방 이후 재일한인들은 일본정부가나 사회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이에 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일본기업의 차별도 당연하였지만, 그들은 일본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재일한인 젊은 세대들은 일본기업의 취업차별에 항의하고 민족성은 달라도 일본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차이나 난민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배타적 자세가 국제적 문제가 되자 결국 일본정부는 1979년 9월에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1982년에는 난민조약을 비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국민’으로 제한되었던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이 일본‘국민’에서 일본‘주민’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재일한인들은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고, 일부 의식 있는 일본인 청년 등이 이들 운동에 동참하고 지원을 하였다. 일본 매스컴도 재일한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 대하여 동감하는 보도를 하였다(金太基 1991, 96-97). 그 결과 일본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로서 재일한인이 부각되게 되고 일본사회의 재일한인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상과 같은 환경 속에서 1980년대 초부터 재일한인이 적극적으로 전개한 지문날인 거부 운동과 더불어, 재일한인도 일본의 ‘주민’이

라는 의식이 일본인 사이에 확산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일본인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인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당시의 주민의식은 시티즌십(시민성)의 자각과 확립이라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고,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한 영주외국인이라는 타자를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즉 ‘국민’이라는 견고한 의식에서 겨우 탈각하여 ‘주민’의식의 자각이라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인 처를 가진 영국인 알랜 히스(Alan Higgs)가 1989년 11월 국정선거권 불인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방참정권 운동은 법정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1990년 9월 오사카(大阪) 거주 김정규 등이 지방참정권(선거권) 부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이어졌다(정인섭 1997, 95). 당시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지방참정권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민단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운동은 자신들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납세실적에 근거한 영주외국인의 참정권 획득 운동으로 확대 되었다(木村幹 2006, 273-275).

마침내 지방의회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오사카부(大阪府) 기시와다시(岸和田市) 의회를 비롯해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국민도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麻野雅子 2006, 296-309).

당시 일본사회는 ‘국민’이라는 벽을 허물고, 타자인 재일한인도 ‘주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었다. 당시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자유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재일한인 등 재일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자민당의 반대 입장은 견고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2) 그래도 ‘국민’인가: ‘주민’의식의 한계

10여년이 지나, 2009년 8월 민주당이 자민당(자유민주당)에 압승하고 8월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후 민주당이 하토야마를 중심으로 재일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을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자민당, 지방자치체, 매스컴,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일본의 요리우리(讀賣)신문이나 산케이(産経)신문 등은 지방참정권의 법제화가 외국인인 많은 지역의 경우 중요한 안보문제를 외국인이 결정하게 되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안보위협론을 적극 내세워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일본여론 또한 지방참정권 법제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본여론도 변한 것이다(김태기 2010, 264-266).

지방자치체도 1990년대 중반과는 달리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지방자치체의 경우 2010년 초까지 아키타(秋田) 등 14개 현의회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전체 47개 도도부현 의회 중에서 1996년 6월 당시에는 26개 의회가 법제화에 찬성하였었는데, 2010년 4월 시점에서는 35개 의회에서 반대결의(청원, 신중 심의 포함)를 하였다. 이 중에서 24개 의회는 1996년에 찬성한 곳으로 2010년에 반대로 '전향'한 것이었다. 4)

결국 민주당의 지방참정권 법제화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당시 일본사회가 재일영주외국인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것을 노정하였다. 즉 일본의 '주민'을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4) 이와 같은 일본지방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1990년대 중반과는 달리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자민당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1990년대 중반에는 법제화 실현의 가능성이 적었으나, 막상 법제화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재고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는 '안보위협론'에 대해 동감하는 지방의원이 증가하였다는 것, 넷째는 1990년대에는 지방참정권 부여 대상이 재일한인으로 여겨졌으나, 2010년에는 뉴커머의 재일중국인이 그 부여 대상으로 부각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자, 지방자치체의 입장도 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김태기 2010, 265).

일본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본사회의 배타성이 또 다시 부각된 것이다.

당시 일본여론의 변화 요인으로는 안보위협론과 경제위협론을 들 수 있다. 즉 1980년대는 일본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로 타자에 대한 배려가 작용하여 재일한인 등 영주외국인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분위기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장기불황으로 인해 일본인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은 반면, 영주외국인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 상대적 박탈감을 일본인이 느끼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함께 재일중국인의 급격한 증가와 상대적 지위 향상 등, 안보위협론과 더불어 이러한 경제위협론이 재일외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에도 반영되었다는 가정이다. 또한 일본과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일한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뉴커머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영주외국인에 대한 '동정론'이나 도의적 책임론이 감소되었다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김태기 2010, 267-268).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차원에서의 보수 우경 세력 나아가 우익 세력의 활성화와 일본국민의 지지를 들 수 있다.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가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5년 1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나 1997년 활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일부 우익 단체들의 움직임 또한 확산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동조하는 일본인 또한 증가하였다. 대표적 강경 보수의 정치가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가 1999년 4월 동경도지사 선거에서 당선한 것은 그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자민당 의원과는 달리 수상으로서 야스쿠니 참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우정성의 민영화 등 작은 정부를 적극 주장한 고이즈미 이치로(小泉一郎)가 일본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기 2006, 305-308) 5).

1990년대와 다른 배타성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게 된 배경은 무엇

일까? 필자는 안보위협론과 경제위협론 그리고 보수 우경 및 우익 세력의 확산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분명히, 일본사회의 현상은 오히려 내셔널(민족적)한 정치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현저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금 세계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민족주의적인 욕구는 실은 급속히 확대하는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일어난 것이며, “자기이익의 불안”이 일으킨 방어적이고 내향적이며 그리고 때로는 배외적인 감정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자가 지적한 것이다(佐々木寛 2010, 2145).

글로벌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일본사회에 중국인,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그리고 일본계 남미인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속에서 재일외국인을 자신과 동일한 ‘주민’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방사회로 나가지 않고, 자신들과 타자를 구별하고 타자를 경계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국민으로 하여금 민족 혹은 국민지향을 하게 만드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며, 일본의 우익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정립된 정치적 사상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많다.⁶⁾ 즉 이것은 일본사회의 경기 불안, 글로벌화 등 불안정한 요소가 일본국민으로 하여금 배타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물론 2008년 8월 일본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정치이념에 대한 지지보다는 장기불황 속에서 생활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새역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좌익(サヨク), ‘인권주의’, ‘아사히(朝日)’, ‘관료’, ‘중국’, ‘한국’,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양식적’, ‘보통의 감각’, ‘건전한 민족주의’,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전통’, ‘서민’, ‘산케이(産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자 관련 사람을 ‘보통이 아닌 사람’으로서 배제하고 반대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이 ‘보통’이라는 것을 입증할 정체성, 즉 그들의 정체성에는 실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小熊英二·上野陽子 2003, 191-203).

물론, 외국인이나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고 하여 일본 국민이 시민성과 관련하여 전혀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주민의식을 깨닫기 시작했고, 국가에 구속된 주민의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시민의식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은 일본인에게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는 자발적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大野順子 2005, 102). 이러한 현상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의 쓰나미 재난에서도 나타났다.

III 일본사회와 글로벌리즘

1.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 정책⁷⁾

일본의 패전 이후 재일외국인하면 대부분이 재일한인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정책은 재일한인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일본사회로부터의 철저한 배제와 동화정책으로 대변된다. 완전한 일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본국적 취득(귀화)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일본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김태기, 1999).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의해 재일한인은 사회적 차별은 물론, 일본국민이 누리는 사회복지혜택도 누릴 수 없었다.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일본사회의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은 1978년에 일본정부가 인도차이나 난민에 대해 “정주허가” 방침을 세운 이후이다. 1970년대 중반에 인도차이나 난민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인 과제로 부상 되었을 때, 이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7) 이 장은 김태기(2007/12)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음.

관심과 비판 속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고, 1978년에 이들 난민에 대해 일본에서의 “정주허가”의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들의 인권과 교육, 생활안정 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1979년 9월에는 국제인권규약(1966년 국제연합채택)에 가입하고, 1982년에는 난민조약(1951년 국제연합채택)을 비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국민’으로 제한되었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주택, 각종 수당 등의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이 일본 ‘국민’에서 일본 ‘주민’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덕분에 정주외국인인 재일한인도 그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일본국민’에게 제한되었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주택, 각종 수당 등의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것이 ‘일본정주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고, 정주외국인의 ‘내국민대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체는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 ‘일본에 주소가 있는 일본국민’에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라는 대상을 시야에 넣게 된 것이다(田中宏 1995, 151-164).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일한인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영향으로, 재일한인도 일본의 ‘주민’이라는 의식이 일본인 사이에 확산되게 되었다. 국민국가 관념에 속박되어온 일본인들은 일본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일외국인하면 대부분이 재일한인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일본계 브라질인, 페루인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들이 입국한 이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국제교류’(제1의 축)와 ‘국제협력’(제2의 축)을 축으로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외국사회 혹은 외국인과 일본사회 및 일본인과의 상호간의 교류와 지

원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정부는 일본사회의 의식 개혁을 시도하였다. 1994년 12월의 유엔 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으로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를 받아 일본정부는, 1995년 12월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이 본부는 1997년 7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에 관한 국내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에서 일본정부는 인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성, 어린이, 고령자, 장애자, 아이누, 동화문제, 외국인, HIV감염자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중요과제를 열거하였다(人權教育のための國連10年推進本部. 1997/07). 하지만 다른 과제에 비하여 일본정부가 제시한 재일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시책은 지극히 간략한 것이며, 형식적인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사회의 인권문제에 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2000년 11월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받아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2002년 3월 “인권교육·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체에 시달하는 등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재일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화 시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재류하는 외국인인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일본국헌법은 권리의 성질상, 일본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본적인권의 향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의 보장, 타국의 문화·가치관의 존중, 외국인과의 공생을 향한 상호이해의 증진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위에 유래하는 재일한국·조선인 등을 둘러싼 문제 외에도 외국인에게 대한 고용차별이나 입주·입점 거부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우리나라가 섬나라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이나 에도막부에 의한 오랜 세월을 걸친 왜국의 역사 등과 더불어 1945년의 언어, 종교, 습관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편견이나 차별 의식은 국제화가 현저하게 진전되고 인권존중의 정신이 국민에게 정착되고 다양한 인권교육 개발의 실시 주체의 노력으로 의해, 위

국민에 대한 이해가 좋아져서, 착실히 개선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일부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서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문화나 다양성을 받아들여 국제적 시야에 서서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이하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외국인이 가지는 문화, 종교, 생활습관 등의 다양성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를 존중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인권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인권존중 사상의 보급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계발활동을 충실화한다(법무성)).

② 학교에 있어서는, 국제화의 현저한 진전을 근거로 하고,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종합적 학습 시간과 같은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나 다른 습관·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한다(또,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하여, 일본어 지도를 시작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간다(문부 과학성)).

③ 외국인에 관해서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입주·입점 거부, 제일한국·조선인 아동학생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건으로서의 조사·처리나 인권상담의 대응 등 해당사안에 따른 적절한 해결을 꾀하는 동시에 관계자에 대하여 외국인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계발 활동을 실시한다(법무성).

④ 외국인의 인권문제의 해결을 꾀하기 위해서, 법무국·지방법무국의 상설 인권상담소에 인권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통역을 배치한 외국인인을 위한 인권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인권상담 체제를 충실히 한다. 한편, 상담에 있어서는, 관계 기관과 밀접한 연계 협력을 꾀하는 것으로 한다(법무성).

일본사회의 재일한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폐쇄성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로 가진 외국인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일본국민에 대한 학교 교육 및 계발을 하고, 인권문제 및 재일한인에 대한 폭력사건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총무성은 새로운 정주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라는 과제 앞에서 2006년 3월 다문화공생플랜(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문화 공생'을 제3의 축으로 하여 이른바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민당의 반대로 지방참정권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재일외국인 및 다문화정책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2. 하토야마 유키오와 글로벌시티즌십8)

1996년 9월에 (구)민주당이 결성 되는데, (구)민주당 결성 전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신당사키가게(新党さきがけ) 소속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는 『論座』 1996년 6월호에 「나의 리베럴 우애혁명」(わがリベラル・友愛革命)이라는 논고를 통해 자신의 정치이념과 사상을 명백히 하고 신당구상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재일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략), 나도 직업상 하늘에서 일본 국토를 내려다보는 기회가 많다. 그럴 때 문득 일본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아무런지 알게 우리들은 일본은 일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암묵적인 이해의 밑에 각종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중략) 우선, 다른 각국에 비교해서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자체가 크게 문제다 이것은 외국인에 있어서 일본은 살기 어려운 나라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중략) 국제화라고 해도 형식에 지나지 않고 일본인의 마음은 결단코 외국인에게 열려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지현(高知縣)의 하시모토 다이지로(橋本大二郎) 지사가 일반 사무직원의 채용에 국적조항을 없애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예상대로 자치성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폐쇄적인 일본의 풍토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지방 분권의 소리가 운다(또 신당사키가게의 니시코오리 아쓰시 錦織淳)의원이 중심이 되어 정주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참정권을 주는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민당의 반발이 강해 논의가 정지된 상황이다.

우리는 한 발 나아가 정주외국인에게 국정참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행정이나 정치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 의해 당연히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필경 일본인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

8) 이 장은 김태기(2010)에서 하토야마의 발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당시 논문을 집필 할 때는 하토야마의 발언이나 행동을 글로벌시티즌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

는 표시이다. 일본이 모든 사람들의 공생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일본인의 자기 존엄이 지금이야말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폐쇄적인 일본사회를 비난하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은 물론 국정참정권까지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야당 지도자이긴 했지만, 열린 일본을 주장하고 재일영주외국인에게 국정선거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과격적이고 지극히 진보적인 것이었다.

이후 1998년 4월 (신)민주당이 결성되는 이 민주당의 기본이념에도 하토야마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당시 민주당은 ‘기본이념’ 속에서, 일본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 우애(友愛)의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 우애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의 자립과 이질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타자와의 공생’을 중시하여야 하며, 이 우애의 정신은 “일본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일본과 세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관되어야 한다.”(日本民主党 1996/9)고 내세웠다. 자민당에서 탈당한 신세대의 정치가이기는 하나 보수정치가로서는 당시 과격적인 정치이념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토야마 민주당은 이러한 이념 하에서, 1998년 10월 국회에서 공명당계와 공동으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장의 선거권 부여법안」을 제출(日本民主党 1998)하였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법안 성립은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2000년에도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또한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지방참정권에 대한 하토야마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하토야마 대표는 2001년 2월 5일 제151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참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IT의 활용은 국적이냐 언어, 인종 그리고 종교 등의 차이로 분단되어 온 시대와 결별하고 다양한 경우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시민으로서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략) 이 새로운 기술과 인권보장이 합해지면 21세기는 공생의 세기 인권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중략) 또한 우리들이 부부 별성을 선택할 수 있는 민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남녀공동참여 사회를 실현해서 열

어가고,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의욕적인 것도 이러한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第191回国會 衆議院會議錄 第2号(2001/02/05)」).

이것은 하토야마의 글로벌시티즌십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일본사회 개조를 주장한 것이다. 하토야마의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하토야마는 『유칸 후지』(『夕刊フジ』 2002년 8월 8일)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애는 그렇게 안 된다. 일본열도는 일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발상은 일본인의 의식을 열리게 하는 것이며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성취가 불가능하다. 나는 거기까지 일본을 열지 않는 한, 일본 자체의 연명(延命)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 질병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 간사장을 맡고 있던 2009년 4월 17일에도 「니코니코 동화」(ニコニコ動画) 인터뷰에서 재일외국인 참정권과 관련해 “출생률 문제를 생각해 봐도, 좀 더 해외에 마음을 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세계에 대해서도 존경받는 일본이 못되고, 일본 국토를 지키는 것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은 단연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j-cast, 2009/04/23)라고 발언하였다.

즉 일본의 출생률이 저하하는 속에서 일본사회의 개방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제로서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재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한 주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민주당은 7월 7일 발간한 「민주당 정책집 INDEX 2009」에서 2007년도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결당 시의 ‘기본정책’에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내걸고 있고,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日本民主党 2009/7)

지방참정권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기도 했던 8월 30일의 제45회 중의원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었다. 마침내 9월 하토야마

연립(民社國)내각이 탄생하게 되었다.

지방참정권에 대한 하토야마의 확고한 입장은 야당이 된 자민당 의원의 표적이 되었다.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의원은 2009년 11월 5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하토야마를 공격하였고, 하토야마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전략) 나는 지방참정권의 논의는 그러므로 대단히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어려운 테마라고 생각합니다(중략) 그러나 외국인에 의해 일본이 왜곡된다는 것 보다, 크게 외국인과의 공생의 일본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도 한편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고(중략) 어떻게 생각해도 내 입장에서 보면, 닫힌 일본열도, 폐쇄적인 일본열도 이대로 좋은 것인가라고 라는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중략) 더욱 개명적인 열린 일본을 만들어 가지 않는, 한이 나라의 큰 몇 가지 테마의 해결은 지극히 곤란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보다, 지역,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도 열린 환경을 나로서, 지금 지방참정권의 문제는 문제로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 가고 싶다는 심정은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토야마의 발언은 글로벌화라는 현실에 대처하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소자 고령화와 인재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일본을 만들어 가야하고, 열린 일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방참정권을 영주외국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필자가 이 장을 통해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일본정치의 총체적인 보수화와 일부의 우경화 속에서도 일찍부터 글로벌시티즌십을 가지고 개방된 일본을 적극 주장한 하토야마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고 지금도 일본 사회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일본의 학교 교육과 글로벌시티즌십

일본의 학교교육은 시민의식 보다는 국민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

에 치중하여 왔다.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다루는 학교 교과목으로 사회과(공민과), 정치, 경제 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교육 이라기보다는 ‘국민’(공민:국가에 봉사하는 주체)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천 보다는 지식함양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 국내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참여하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淺野誠/D. セルビ, 2002, 127). 그것은 일본국민의 중앙권력에 대한 의존심을 높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켜 결국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의 일본의 교육은 자립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았다(大野順子 2005, 104, 115).

일본 교육계에서 시티즌십 및 글로벌시티즌십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1980년대 후반 영국의 글로벌 교육은 “월드 스터디즈”(글로벌시티즌십 교육)라는 명칭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들 교육의 이론, 목적 그리고 구체적 활동 사례 등은 “Global Teacher, Global Learner”(Pike and Selby 1988), “Making Global Connections”(Hicks and Steiner, 1989), “World Studies 8-13”(Fisher and Hicks, 1985)에 소개되었다. “Global Teacher, Global Learner”가 일본에서 『지구시민을 키우는 교육(地球市民を育む教育)』으로 번역 출판된 것이 1997년이다. 이후 일본의 NGO와 교육관계자 등은 글로벌시티즌십(지구시민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일본교육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시티즌십을 포함한 시티즌십 교육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98년에 영국의 정치학자 클릭(Bernard Crick) 등에 의해 이른바 ‘클릭 보고서’가 발표되고 영국과 스웨덴에서 2002년부터 시티즌십 교육이 중등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이후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시티즌십 및 글로벌시티즌십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降旗直子·古田雄一 2012, 94).

2003년 3월에 나온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본법과 교육진흥 기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은

21세기를 향한 일본인의 육성에 관한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항목에서 국가와 사회형성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일본인의 시민성 육성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다(大野順子 2005, 103-104). 또한, 경제산업성(『시티즌십 교육과 경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활약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06)과 총무성은 연구회를 조직하여 시티즌십 관련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지방자치제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티즌십 교육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도쿄도(東京都) 시나가와구(品川區)에서는 2006년도에 구내의 초, 중학교에 “시민과”(市民課)를 개설하였다.

이들 교육은 주로 시민으로서의 규범이나 도덕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참가 등 시민성의 기초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치적 덕성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이른바 정치성에 관한 지도는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특정 정치사상이나 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교육기본법 규정 등 정치교육에 대한 제한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정치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降旗直子·古田雄一 2010, 94).

이러한 과제를 넘어서기 위해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경우는 정치적 시티즌십 교육을 선구적으로 도입하였다. 가나가와현은 2006년도 말부터 4개, 2007년도에는 8개교를 시범교로 정하고 시티즌십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선거에 맞춰 전체 144개 현립 고등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정치적 시티즌십 교육을 선구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도부터는 전 현립 고등학교에서 정치적 시티즌십을 포함한 시티즌십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降旗直子·古田雄一 2010, 95). 이들 학교에서는 시민의식, 도덕, 국내외의 차별, 환경, 빈곤, 공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티즌십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시티즌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무엇이 시티즌십인가?』(Heater 1999)가 제시한 시티즌십의 단계(정치성 →도덕성→규범

→정치성)에서, 세계 인류가 공동체임을 느끼는 정체성(Identity) 단계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인류 공동체로서 책임을 의식하는 단계 즉 도덕성(Morality)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인 정치성 함양을 위한 교육까지 모색하고 있다. 아무튼 일본 교육계에서는 최근 글로벌시티즌십을 포함한 시티즌십 교육이 일부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대학에서도 글로벌시티즌십 프로그램(Global Citizenship Program, GCP)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수도(首都)대학 도쿄(東京、전 도쿄도립대학), 소카(創価)대학, 모모야마(桃山)대학 등은 각 학부로부터 약 20-3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GCP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GCP 과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인재 양성이 그 시야에 들어있다. 과거에는 외국어를 잘 하고 외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는 글로벌 지식 함양 교육이 인재교육의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최근 이들 대학에서는 그 보다 한 단계 넘어서서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이나 빈곤 그리고 차별 등 국제적인 문제에 동감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앞으로 국제적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나아가 일본사회에는 다양한 국제협력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협력 NGO센터(JANIC)가 발행하는 “국제협력 NGO 디렉터리”에는 1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가지고, 회계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는 NGO단체로 약 300개의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SHARE 2013).

IV 결론

1990년대 이후 일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재일외국인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에 일본에서 외국인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은 약 87만 명이였다. 그러나 2012년 말 현재 2,033,656만 명을 넘었다. 앞으로도 일본의 인구감소는 예상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론 그들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난 재일외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개방성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일본국민들은 ‘주민’의식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재일외국인을 ‘주민’으로 받아들일려고 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의 일본사회는 변했고, 지방참정권을 재일영주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글로벌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일본사회에 중국인,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그리고 일본계 남미인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속에서 재일외국인을 자신과 동일한 ‘주민’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방사회로 나가지 않고, 자신들과 타자를 구별하고 타자를 경계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가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수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요구와 자발적인 개혁 등에 의해, 재일외국인정책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책’과 ‘실제’의 차이가 있지만, ‘정책’상으로도 재일외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 등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들과 일본인의 공생을 위해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차별을 없애는 홍보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관심을 표명한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와 같은 선구적인 글로벌시티즌십 주창자도 존재한다. 일본사회의 보수성 속에서 하토야마는 일본열도는 일본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당당히 발언하고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돌출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오랫동안 주창해 온 ‘우애’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1990년대 말 이후 일본 교육계는 글로벌시티즌십에 관심을 가지

고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지역적으로 한정된 글로벌시티즌십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확산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배타적인 보수성을 탈각할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글로벌시티즌십이 일본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당연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일본의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본사회의 변화를 냉정히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변화의 단초로서 글로벌시티즌십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하였다. 일본사회의 하나의 축으로서 글로벌시티즌십이 앞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다.

< 참고문헌 >

- 김태기, 1999,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강덕상·정진서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태기, 2006, “일본의 우경화와 한국”,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1호, pp. 289-318.
- 김태기, 2007,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정책과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적 정체성의 변화에 관한 고찰”, 『재외한인학회』, 제18호, pp. 5-30.
- 김태기, 2010, “일본민주당과 재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9호, pp. 235-277.
- 배영주, 2003,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제44집 제2호, pp. 145-16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2013, 『12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정인섭, 1997/10, “재일한국인 사회의 최근 동향과 쟁점: 참정권 획득운동을 중심으로”, 『외교』 제43호, pp. 94-102.
- Heater, Derek, 1999, *What is Citizenship?*, Cambridge: Polity Press.
- Pike, Graham and David Selby, 1988, *Global Teacher, Global Learner*, London: Hodder & Stoughton Educational.
- Fischer, Simon and David Hicks, 1985, *World Studies 8-13: A Teacher's Handbook*, Edinburgh: Oliver & Boyd.
- 淺野誠·데이ヴィッド·셀비(David Selby)編, 2002, *グローバル教育からの提案 : 生活指導・総合学習の創造*, 東京: 日本評論社.

- 麻野雅子, 2006, “日本における外国人政治参加の現状”(河原祐馬·植村和秀編, *外国人参政権問題の国際比較*, 京都: 昭和堂)
- 大野順子, 2005/11, “地域社會を活用した市民的資質・シチズンシップを育むための教育改革: 地域の抱える諸問題へ関わることの教育的意義”, 『桃山學院大學總研究所紀要』, 第31卷 第2号, pp. 99-119, 大阪
- 小熊英二·上野陽子, 2003,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慶応義塾大學出版會
- 金太基, 1991/7, “在日韓國人3世の法的地位と‘1965年韓日協定’(2)”, 『一橋論叢』, 第106卷 第1号, pp. 82-104, 東京
- 木村幹, 2006, “在日韓國・朝鮮人問題と外国人参政権”(河原祐馬·岡山大學編, *外国人参政権問題の国際比較研究*, 京都: 昭和堂)
- 佐々木寛, 2010/5・6,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射程”, 『立命館法學』, 第333号·第334号, pp. 2141~2169, 京都
- 人權教育のための國連10年推進本部. 1997/07. “人權教育のための國連10年’に関する國內行動計畫”, <http://www.kantei.go.jp/jp/singi/jinken/kettei/970704keikaku.html>, 2008/02/10.
- SHARE, 2013, “國際協力一般について”, <http://share.or.jp/health/fac/ngo.html#3>, 2013/11/05.
- 總務省統計局, 2013, “人口の推移と將來人口”, <http://www.stat.go.jp/data/nihon/02.htm>, 2013/11/04.
- j-cast, 2009/04/23, “‘日本列島’、日本だけの所有物じゃない” 鳩山幹事長 ‘ニコ動’で‘炎上’”(J-Castニュース), www.j-cast.com/2009/04/23040065.html, 2009/11/20.
- 田中宏, 1995, *在日外国人 新版*, 東京: 岩波書店
- 日本民主党, 1996/9, “民主党の基本理念”, <http://www.smn.co.jp/takano/who.text5.html>, 2009/11/22.

日本民主党, 1998, “永住外國人に對する地方議會議員・長の選舉權付与法案”, <http://www.dpj.or.jp/news/?num=8007>, 2009/11/23.

日本民主党, 2009/7, “民主党政策集 INDEX 2009”

法務省人權擁護局, 2002/3, “人權教育・啓發に關する基本計畫”, <http://www.moj.go.jp/JINKEN/JINKEN83/jinken83.html>, 2008/02/10.

法務省, 2013, “國籍・地域別 入國外國人の在留資格(2012年度)”,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1233>, 2013/11/02.

法務省, 2013, “月別 主要港の出國日本人(2012年度)”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1180>, 2013/11/02.

降旗直子・古田雄一, 2010/10, 「政治的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實踐の導入アプローチとその歸結：神奈川県を事例として」, 『東京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教育行政學論叢』, 第32号, pp. 93-112, 東京

The Japanese Conservativeness and Global Citizenship

Kim, Tae-ki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changes in Japanese Society with the concept 'global citizenship'.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changes in Japan post 1990s with two concept 'conservativeness' and the 'global citizenship'.

In mid 1990s, Japanese people tried to accept foreigners in Japan as their citizen in local society. However, Japanese society changed in 2010s, Japanese public opinion refused to give the foreign permanent residents the rights to vote in local. In radical changes such as globalization, it can be seen as classifying and defending 'themselves' from 'others'.

But, society in Japan is constantly in change. Compared to the past, policy in foreigners in Japan by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improved. Hatoyama the ex-prime minister confidently stated that Japan isn't the only Japanese's possession and tried hard to legalize the foreign permanent resident in Japan's rights to vote in local by making it top priority in Democratic party. His statement was based on his political ideology "friendship".

Post late 1990s, educational relatives in Japan was concerned

in global citizenship and actively tried to introduce it to school education. It is still in baby steps, and being operated in limited regions, this education will be spread from now on.

Keywords : Global citizenship, citizenship, Japanese conservatives, Foreigners in Japan, Koreans in Japan